

노제없이 운구 현충원 80평 묘역 안장

미리보는 장례식

영결식 광화문 등 전광관 생중계 묘역 최대한 소박하고 검소하게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최고의 예우인 국장(國葬)으로 치르기로 함에 따라 오는 23일 국장 장례 행사가 엄수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첫 국장이다.

아직까지 세부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형식 면에서는 국장과 국민장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번 국장은 지난 5월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장의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장은 국민장과 마찬가지로 당일 발인식-영결식-운구-노제-안장식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에서는 노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이번 국장에는 정부와 유족 측의 합의하에 노제를 지내지 않기로 해 장례 의식 가운데 노제가 없다. 따라서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동작동 국립묘지로 운구되는 도중 여의도 일대에서 민주주의

와 화합을 희구하는 만장이 나무길 전망이다.

◇국회에서 발인·영결식=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3부 요인과 주한 외교단, 조문사절, 유가족과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할 가운데 군악대의 조악 연주로 시작된다.

의식은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이달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인 약력보고, 공동장의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와 유족 측 공동장의위원장의 조사,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의 종교의식이 거행될 전망이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선서를 비롯한 고인의 행적을 가리는 생전의 영상이 대형 전광관을 통해 방영되고, 유족과 고위 인사 등의 헌화, 추모공연, 조가에 이어 삼군 조총대원들이 조총 21발을 발사하는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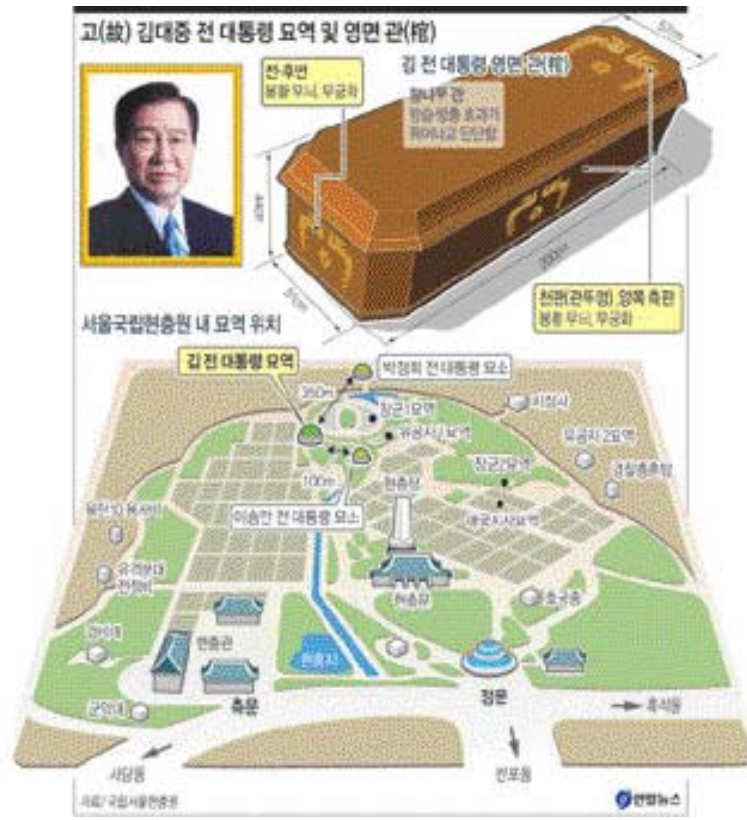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영결식은 1시간 10분가량 걸렸다. 영결식 장면은 시각에 입장하지 못한 국민을 위해 광화문 등지의 대형 전광관을 통해 생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결식이 끝나면 김 전 대통령의 유해는 곧바로 장지인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으로 운구된다.

◇묘역 안장=김 전 대통령의 묘역은 국가유공자 제1묘역 하단으로, 인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중종의 후비인 창빈안씨의 묘소가 있다. 뒷자리는 지관(地官)과 김 전 대통령의 장조카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현충원측은 “유가족이 묘역을 최대한 소박하고 검소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묘역은 국립묘지설치법에 따라 봉분과 비석, 상석, 추모비 등을 합해 80여 평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부터 묘소 정비작업에 착수해 21일에는 묘소의 틀을 갖추는 ‘활개치기’ 작업을 진행하고 22일에는 봉분 조성과 진입로 개설, 임시재단 등을 설치하는데 이어 23일까지는 조경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 묘역은 다른 전직 대통령 비하문 상당히 협소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은 주차



장과 진입로 등을 모두 합쳐 각각 500평, 1천100평이다.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은 추후 유족이 원할 경우 부인 합장도 가능하다.

◇향나무 관에서 영면=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될 관(棺)은 향나무 재질의 길이 2m, 높이 44cm에 위쪽 폭 57cm, 아래쪽 폭 51cm 크기로, 천판(관뚜껑)과 측판 양쪽에는 대통령 문양인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고, 전면과 후면에는 봉황 무늬와 함께 국화의 무궁화가 상각됐다. /연합뉴스

의회주의자 DJ 장례도 국회서

정치적 삶의 터전...현정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회에서 엄수되는 것은 현정 사상 처음이다.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이 될 국회는 김 전 대통령이 평생 정치 활동을 한 정치적 삶의 터전이었다. 1998년 2월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빈소와 영결식 장소를 국회로 선택할 배경에 대해 “국회는 민주주의 상징이고 미래의 전망으로 김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위해 많은 공적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61년 제5대 민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 곳에서 40여년간 정치활동을 펼쳐며 민주화라는 일생의 과업을 실천했다.

김 전 대통령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6대 의원 때부터다. 목포에서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6대 국회 초반 6개월간 13차례나 본회의

의 발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특히 1964년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시 본회의장에서 5시간 19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한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유명한 일화다.

6선(5·6·7·8·13·14대) 의원 출신인 김 전 대통령은 국회를 통한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는 오랜 야당 지도자로서 솔한 장외투쟁을 해왔지만 ‘원내의 병행 투쟁’이 소신이었다.

신군부의 집권 계기가 된 12·12사태에 대한 투쟁 노선을 놓고 야권 내 이견이 격화됐던 1994년 당시 민주당 이기택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등원을 촉구, 정면 충돌한 것은 지금도 정치권에서 회자된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이끌었을 때도 국회 복귀를 혼수 했었다. /박지경기자 jwpark@kwangju.co.kr



20일 오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國葬 결정 배경 李대통령 결단, 논란 잠재워

정부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장례를 최고 예우인 국장(國葬)으로 엄수하기로 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적 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저녁까지도 장지 문제 등으로 유족 측과 김 전 대통령의 장의 협의를 놓고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형평성과 전례 문제를 들어 ‘국민장’을 거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유족 측이 ‘국장’을 요구했던 것이다.

또 장지 문제도 의견이 달랐다. 이

회호 여사 등 유족들은 ‘상징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선호했지만 정부는 형평성과 관례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업적과 사회 통합을 들며 유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유족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

물론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에는 지난 50년간 한국 정치의 거목으로서 DJ가 이룩한 업적과 성과가

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달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가진 공식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께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국장으로 하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역사의 뒀안길로 들어선 ‘정치 거목’의 국장 결정을 “합당한 결정”(한나라당), “당연한 결정”(민주당), “(마땅한) 도리”(민주노동당)라며 이견 없이 수용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교동-상도동계 화해 기류

양 계파 말형 권노갑·최형우 DJ 빈소서 협력 다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서거와 병 문안을 통한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정치적 화해 선언을 계기로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세력인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사이에도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9일 김 전 대통령 빈소에선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말형 권노갑 노갑, 최형우 전 의원이 빈갑계 만나 손을 맞잡았다. 1987년 대선에서 후보단일화 실패 이후 이어져 온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는 듯 최 전 의원은 눈물까지 지었다.

동교동계 한광옥 민주당 상임고문은 20일 국회에 마련된 빈소에서 “YS

가 병문안 때 정치적 화해 얘기를 하신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살아 계신다. 더 늦기 전에 후배들도 정치적 화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도동계인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는 이날 DJ 생전에 두 사람이 5·18 묘지에서 만나게 하려던 계획이 성사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두분의 후배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화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화해의 움직임은 민주협 동지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협은 80년대 DJ와 YS가 공동의장을 지

냈고 동교동·상도동계가 함께 꾸려나갔기 때문이다.

김상현 공동 이사장은 이에 대해 “다음달 초 민주협 모임에서 두 분의 정치적 화해를 어떻게 계속·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DJ와 YS의 업적에 대한 상호 인정과 재평가 작업을 통해 구체적 화해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교동과 상도동계의 정치적 화해는 여야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 계파 정치인 대부분 원로정치인이니만큼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